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첫 걸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온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이 실현되었지만,
지역간,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신적·경제적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진정 부강한 나라는 균형잡힌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산업과 문화를 간직한 지역,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나누며 커가는 지방,
특성있는 지방을 지원하는 중앙.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한다면
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국의 균형발전, 나아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 줄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해답입니다.



찾아보기 <<<



I.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 수도권 집중 심화	4
II.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6
1.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6
2.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7
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8
III.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	10
1.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모색	10
2.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	11
IV.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내용	12
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12
2.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13
가. 낙후지역개발 촉진	13
나. 지역혁신역량 강화	14
다. 지역특화발전 추진	15
라.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16
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17
3.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	18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19
V.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위하여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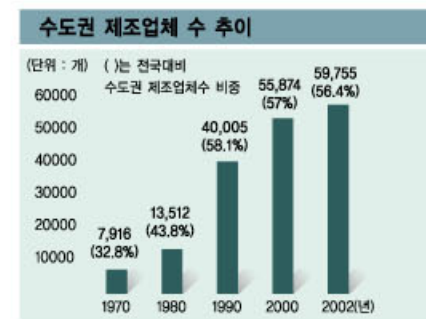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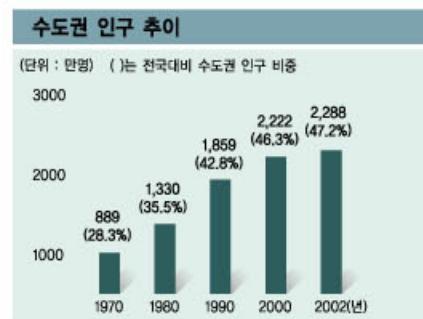
II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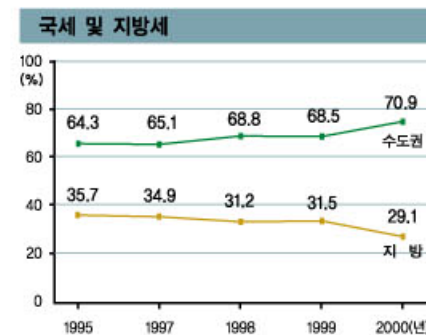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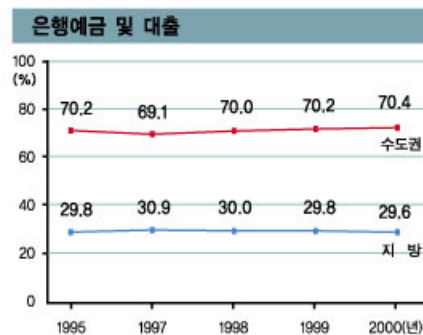
수도권 집중 심화

■ 수도권 집중의 현주소

-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00년 기준)이나, 인구는 46.3%, 중앙정부 부처는 100%, 기타 공공기관은 79%('01년 기준), 30대 대기업 본사는 88.5%('00년 기준), 10대 명문대학은 80%, 제조업체는 57%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총량 경제력의 52.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집중도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 46.3 : 53.7, 은행예금 및 대출은 70.4 : 29.6,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은 70.9 : 29.1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 '00년 기준)



■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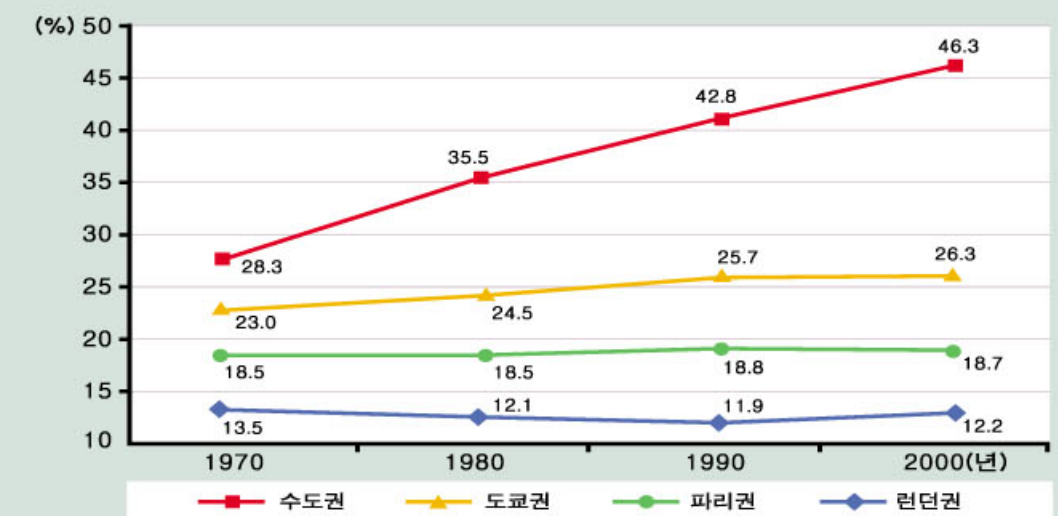
- 제조업·금융·서비스 산업의 지역간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재정, 사회 기반 및 문화적 시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면서, 대도시 지가상승, 교통혼잡, 주택부족, 공해발생, 지방대학의 약화,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하며,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평균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수도권은 92%, 서울은 82%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울시 교통혼잡 비용은 4.7조원('00년 기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 지역 갈등 심화와 지역주의 대두로 국민분열이 초래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박탈감이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동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중앙이 통제하는 지방화, 중앙의존적인 지방의 행태가 고착되어 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 발전을 지연시켜 국가의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늦추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비중의 국제 비교

- 외국의 경우, 주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앙 집권형 국가 중 프랑스는 국가균형발전추진단(DATAR)을 설치·운영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힘입어 2000년 현재 파리권의 인구비중이 약 18%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Ⅲ]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1.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 지방 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 집중 억제 등 소극적 정책에 치중했고, 균형발전 정책을 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추진체계가 없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없어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동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시책 내용	평 가
'62 ~ '79 (3·4공화국)	•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64) • 그린벨트 지정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 중심으로 추진
'80 ~ '87 (5공화국)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82) • 수도권 규제범위를 경기·인천까지 확대	• 수도권억제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 '82년 올림픽 유치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
'88 ~ '92 (6공화국)	• 지역균형개발 기화단 설치 ('89) •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 현상 심화
'93 ~ '97 (문민정부)	•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 개발촉진지구 도입 ('94) • 준농림지 개발 허용	• 세계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 차원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초래 • 준농림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내 공장·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98 ~ '02 (국민의 정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규제 완화	•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 가속화

2.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 총량성장에서 질적 균형성장으로 전환

- 총량적 경제규모 위주 성장에서 삶의 질, 문화, 환경 등 생활의 제반여건을 두루 고려하는, 균형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지방의 창의와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 지방 스스로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적 발전체제로 전환합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진

-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관리에서 자립형 지방화와 수도권의 계획적·과학적 관리의 병행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방의 혁신능력과 특성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책 추진

- 대학, 연구소,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대 육성, 지역특화발전 추진, 지역전략산업 선정 계획 등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종합적·일관적 국가균형발전 추진

- 특별법 제정·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과 재원을 총괄 조정하는 종합적·일관적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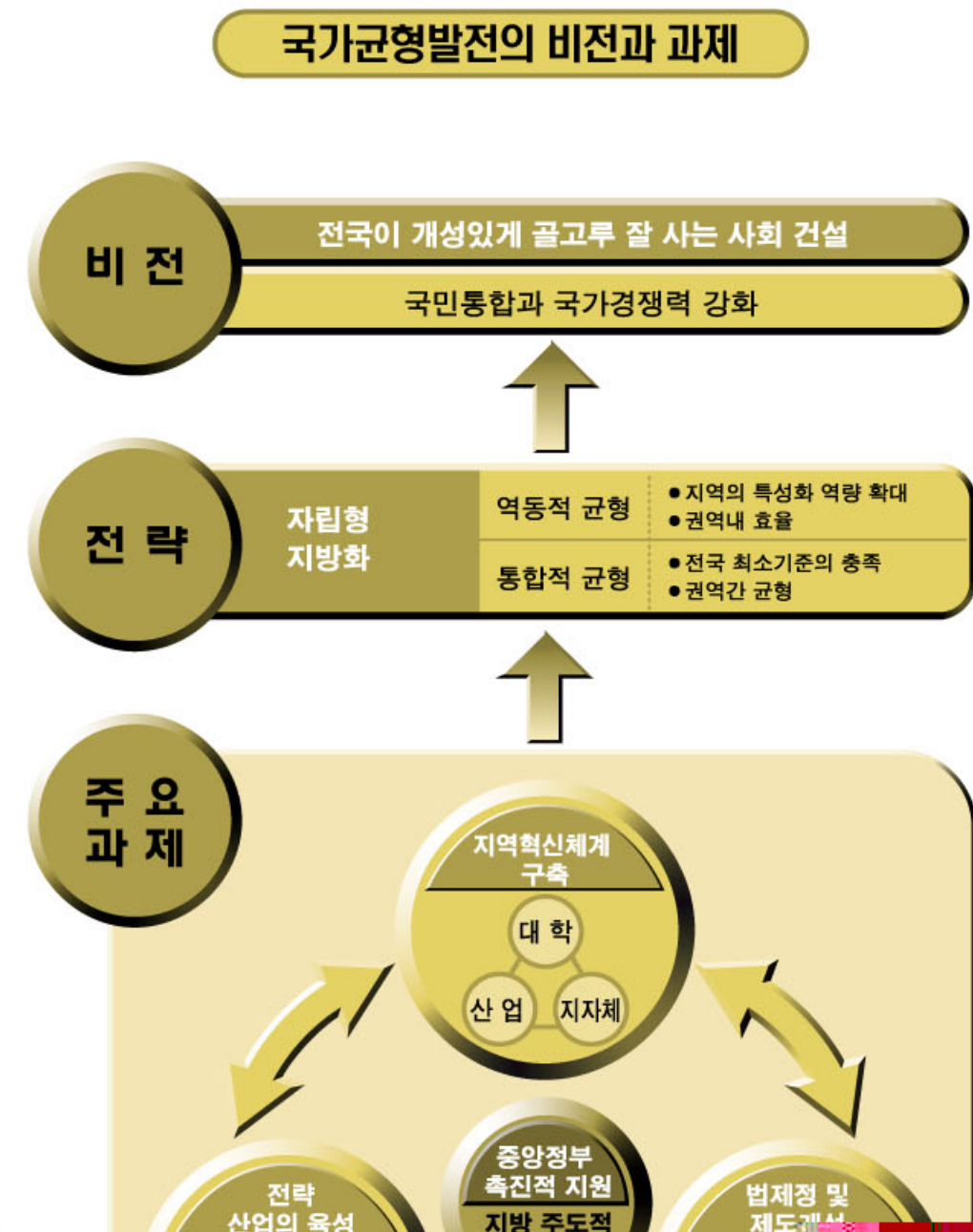
- 지방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모든 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경제 전반을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 균형발전의 비전 :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

- 균형 없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분권-분산 발전모델로 전환하며, 기존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균형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

- 지역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권역내 효율을 실현하는 동시에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을 통한 권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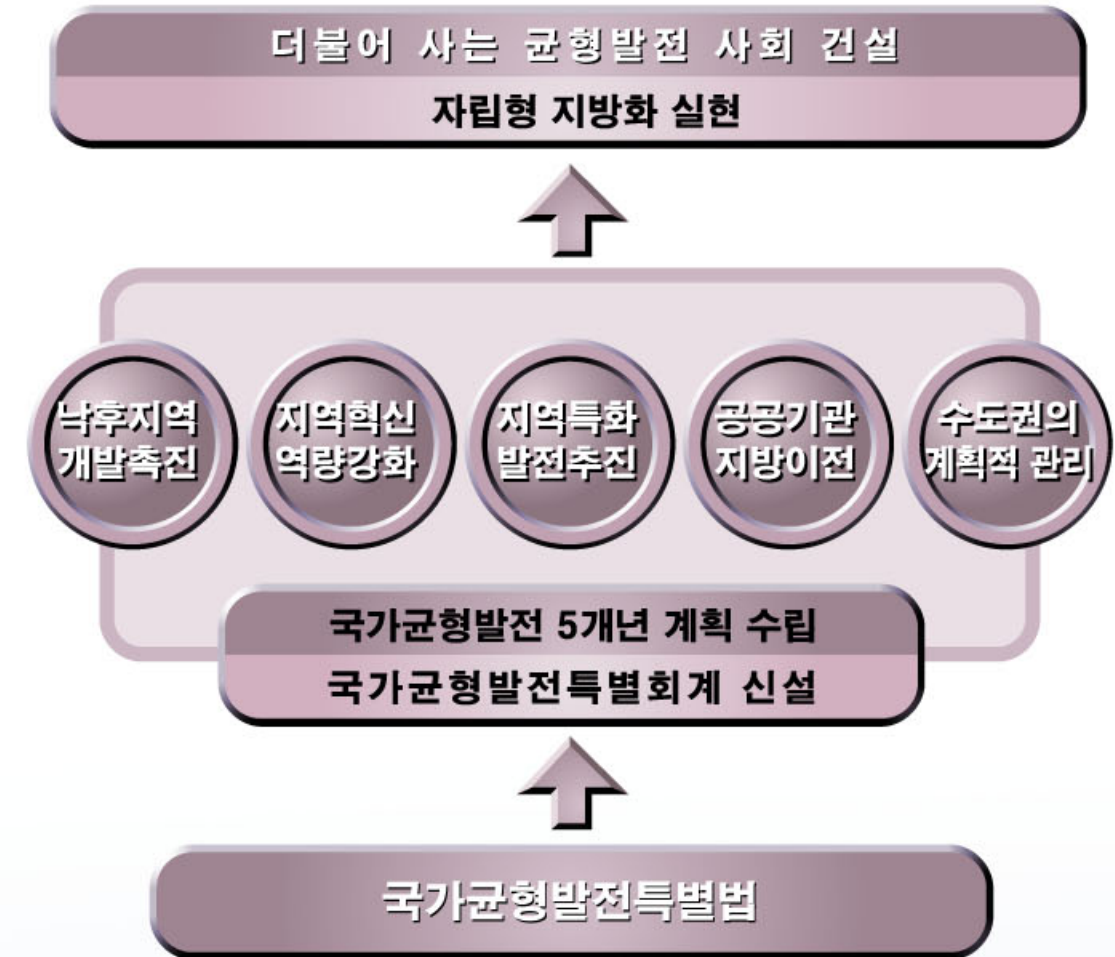
[Ⅲ]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

1.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모색

-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획기적인 지방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중앙 지방 간의 균열과 갈등만 커지고 국가경쟁력도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기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선택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추진체계와 관련 예산의 통합지원으로 균형발전에 성공했습니다.
-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중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합니다.
- 참여정부는 특별법 및 특별회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3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방을 상승국면으로 반전시키고자 합니다.

2.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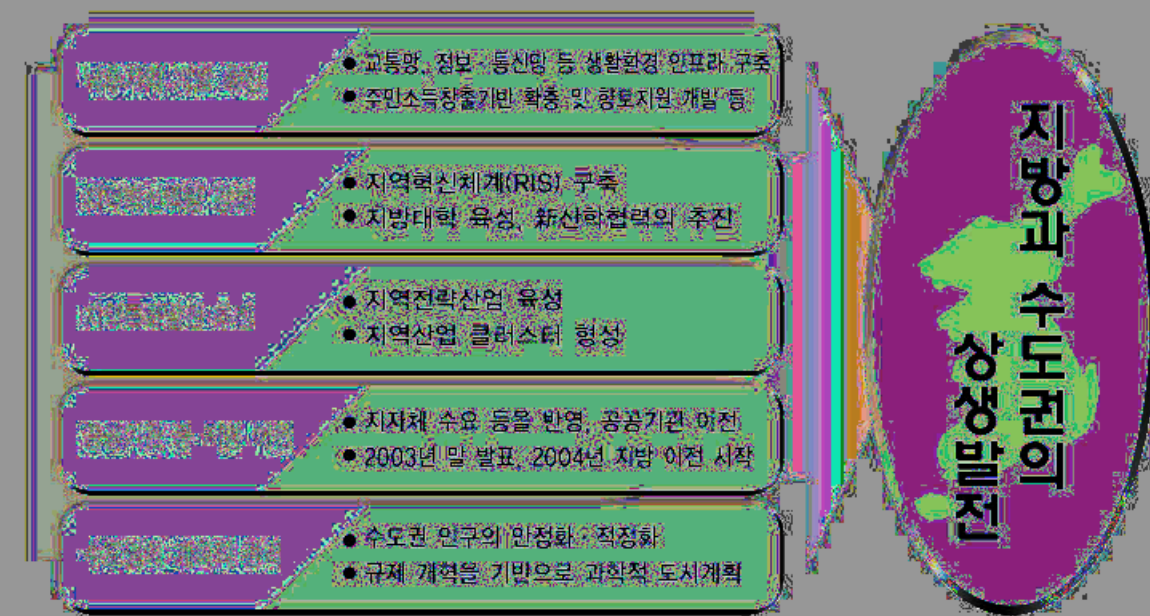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내용

1.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 [illegible]

- Figure 1. The proposed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aphylococcus aureus* infection in the skin of the patient with the skin disease. The patient with the skin disease is exposed to the *Staphylococcus aureus* bacteria. The bacteria enter the skin through the wound and cause the infection. The infection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the bacteria in the skin, the formation of the absces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ellulitis. The infection is treated with antibiotics and surgical drainage. The patient is monitored for the resolution of the infection and the healing of the wound.

- [illegible]



- [illegible]

나. 지역혁신역량 강화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 지역혁신체계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합니다.
- 지방에 대한 R&D 예산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03년 말까지 지역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실무기구 선정을 완료하고, 지역혁신사례집 및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등을 작성·배포할 예정입니다.

■ 산학협력체계 강화

-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간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유도하는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및 지역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도모합니다.

다. 지역특화발전 추진

■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 제조업, 문화, 관광, 물류, 유통 등 전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산업진흥사업(4대 및 9대 지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의 조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합니다.

■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정책의 추진

-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에 대해 일관된 기획, 관리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SOC 등 기존 하드웨어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산·학·연 등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결집 시킵니다.

■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설치,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 도모

-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구를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특구 지정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합니다.
- 2003년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 2004년 상반기 중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 ● ●

나후지역의 발전이 촉진됩니다

지역간 불균형이 줄어듭니다

● ● ● ● ●



라.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

■ 과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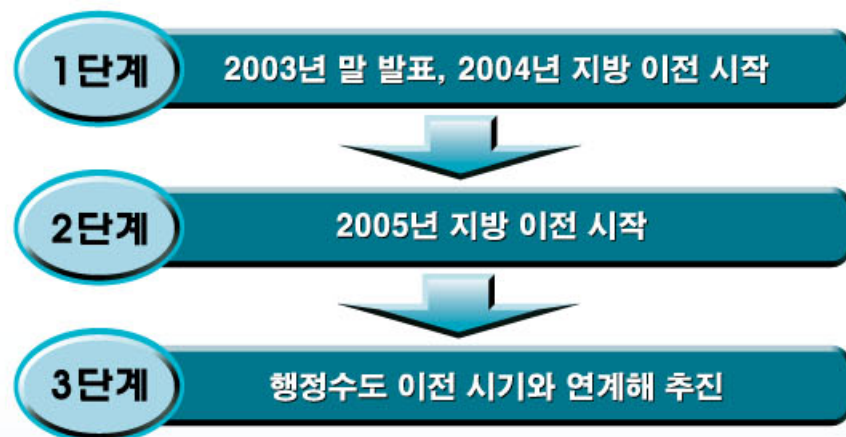
-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전국의 79%('01년 기준)로, 이는 수도권 집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을 통해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발전의 선도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 지방이전 기본방향

- 新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기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각 기관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세부 추진방안

- 원칙적으로 기능별 유사기관을 집단 이전하되, 대규모 기관은 개별 이전을 허용해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유도할 것입니다.
- 이전 대상 기관과 해당 지자체 간에 상호협상 및 이전협약을 체결토록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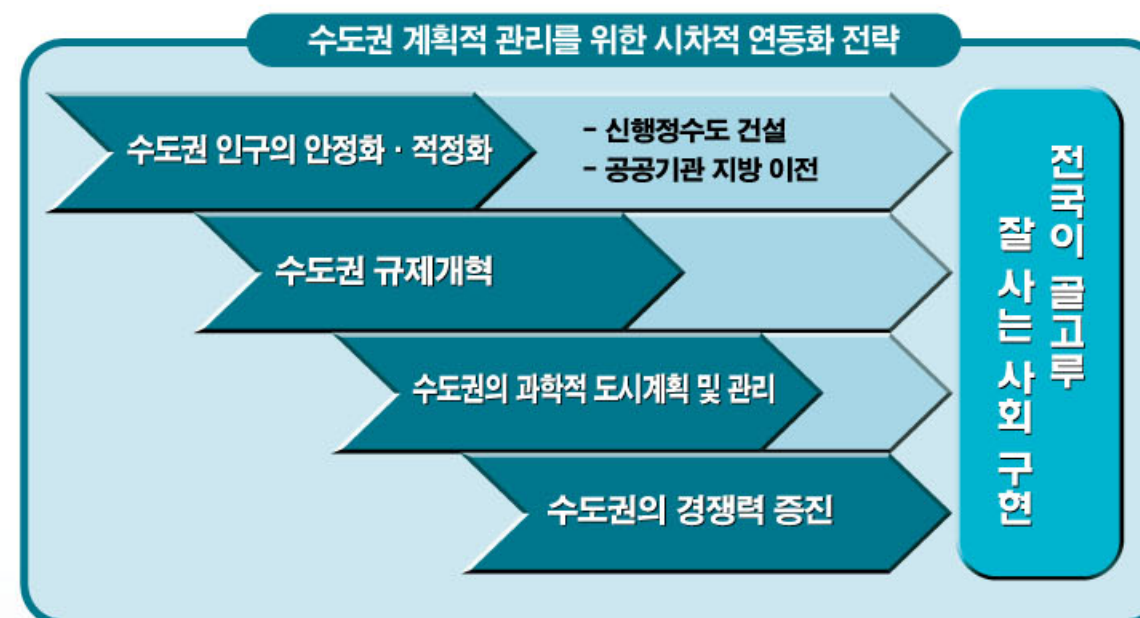
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Win-Win)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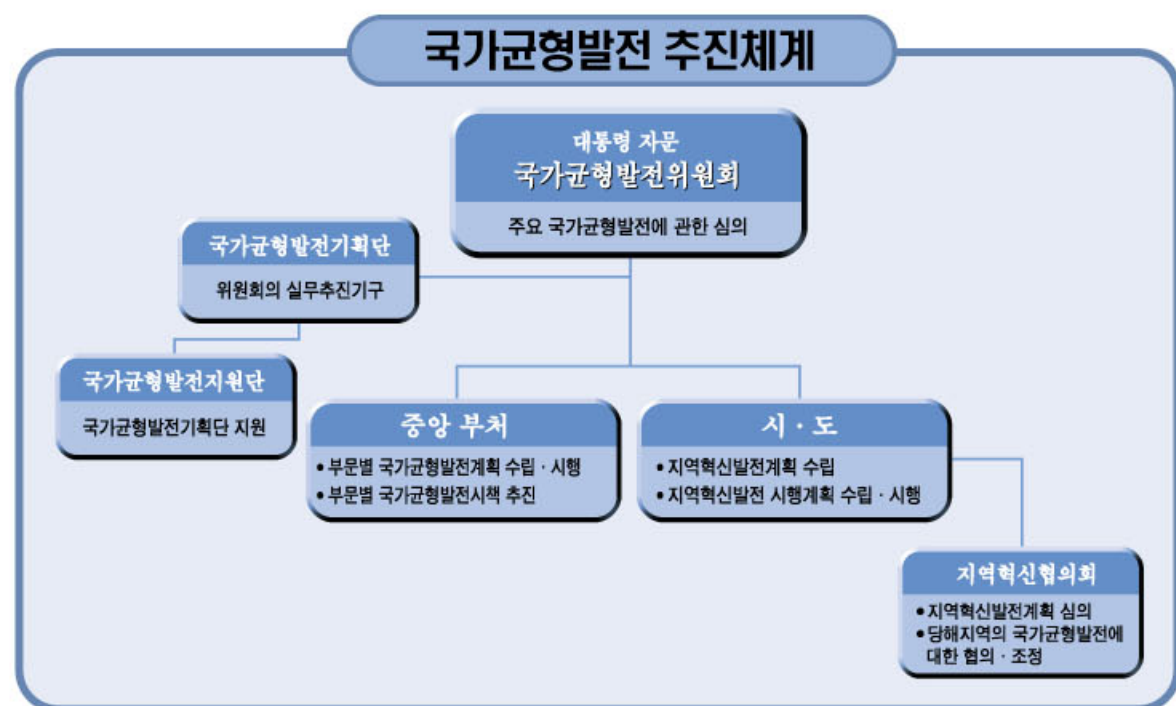
- 적극적인 지방자립기반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 수도권은 양적(Quantity)성장에서 벗어나 혁신과 효율을 통한 질적(Quality)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시차적 연동화 전략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적정화, 규제개혁, 과학적 도시관리, 경쟁력 증진 등 관련 정책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하고 균형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입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회의장협의체 추천위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지방 거주자로 구성합니다.

■ 국가균형발전기획단

- 위원회의 실무추진기구로서 위원회 소속 하에 설치되며, 관련 부처 및 시·도로부터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

-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지원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혁신협의회

-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의 심의기구로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합니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 보조금 등 지방 이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기획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 재정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재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합니다.

■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

-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세,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과밀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합니다.

■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구분 추진

- '지역개발사업계정(지역간 불균형 시정분야)' 과 '지역혁신사업계정(특성화발전분야)' 으로 구분·설치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

구 분	지역개발사업 (지역불균형시정)	지역혁신사업 (특성화발전)
사업 내용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문화관광진흥사업 •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 향토자원 개발·활용	•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 지역전략사업 육성사업 •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 지역 과학기술 혁신사업 •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 이전
주요 재원	• 주세 80% • 토특재원(개발부담금 등) • 농특세 등 타 특별회계 전입금 • 일반회계 전입금,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 주세 20% •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

■ 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



IV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위하여

■ 지역기업이 살아나고 지방의 청년실업이 해소됩니다

- 지역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 선도 지식 및 기술의 지원자로서, 창의적인 인력의 공급자로서 지방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중심축으로서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합니다.
-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선정하고, 지역별 산·학·연 등의 혁신역량을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결집하여 지역전략산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개방형, 통합형, 혁신지향형 新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클릭하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가 열립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pcbnd.go.kr

※ 홈페이지 주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영문명칭의 약어입니다.

■ 홈페이지 주요 내용

주요 메뉴	세부 항목
위원회 소개	인사말, 위원회 연혁, 위원회 위원 소개, 위원회 활동, 구성 및 운영, 기구표, 찾아오시는 길
정책소개	의제 도출 배경, 현황과 필요성, 비전과 전략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소개, 지역혁신 전문위원회, 전략산업 전문위원회,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수도권관리 전문위원회
참여마당	FAQ, Q&A, 토론평, 나도 한마디(자유게시판)
알림터	공지사항, 새소식, 보도자료, 언론보도/해명, 균형발전동향, 일정
자료실	정책자료실, 사진자료실, 동영상자료실, 설문조사, 뉴스레터, 신문스크랩
지역혁신 네트워크	시·도별 유관기관 링크

■ 지역혁신 네트워크

- '지역혁신 네트워크'는 유관기관 검색이 편리하도록 전국 지도를 중심으로 각 기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링크해 놓은 것입니다. 초기화면에는 중앙단위 4개 유관 검색시스템과 5개 연구회, 각 지역 소재 유관기관이 전국지도를 중심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 현재 '지역혁신 네트워크'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창업 보육센터, 테크노파크, 연구원 등 총 270여개 기관의 홈페이지가 지역별로 분류, 연결돼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민단체, 권관운동본부 등의 홈페이지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통편

주 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종합청사 6층

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

버 스 | 세종문화회관 앞 : 8, 8-1, 20, 23, 38, 53, 83, 83-1, 89, 135, 135-1, 135-2, 136, 142, 153, 156, 1005, 1005-1(좌), 45-2(좌), 601(공항버스), 1005-3(좌), 1007(좌)
교보문고 앞 : 6, 8, 32, 59, 89, 135, 135-3, 147, 150, 158, 42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찾아오시는 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화번호

직통전화	02) 3210-4803~5	구내전화	02) 3703-2685~90
지역혁신팀, 전략산업팀	02) 3703-2685~86	기획팀, 홍보팀, 제도개선팀	02) 3703-2688~90
대외협력팀	02) 3703-2687	수도권관리팀, 정책연구팀	02) 3703-2697~98
FAX	02) 3703-2694		